

# ‘경제통’ 윤희숙 vs ‘민생통’ 전현희 … 與野 여전사 맞대결

## 22대 총선 격전지

### 중·성동구갑

강북 한강벨트 대표적 요충지  
두후보 모두 지역연고는 없어  
여론조사서 오차범위 내 접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중·성동구갑에서 서울 서초출로 지역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중·성동구갑 여야의 공격력 좋은 여성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됐다.

중·성동구갑은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으로는 응봉역, 서울숲역, 뚝섬역, 성수역, 상왕십리역, 왕십리역, 행당역, 마장역, 신답역, 답십리역, 장한평역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아파트와 빌라촌이 밀집한 왕십리도선동과 역시 아파트 단지가 많은 행당2동에 세대가 밀집해 있다.

#### ◆KDI 출신 경제전문가 윤희숙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다. KDI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바 있고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구갑 후보가 14일 서울 왕십리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 후보 측

(현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관심을 모았다.

윤 후보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반대 자유토론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연설을 해 유명하다. 또한 공공기관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행한 경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구갑 후보가 13일 성동구 지역 주민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전 후보 측

정책에 대한 해설서인 ‘정책의 배신’과 국회의원으로서 느낀 혐오정치에 대한 에세이집 ‘정치의 배신’을 펴내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마치지 못한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국회는 지난 2021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윤 후보

의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윤 후보는 부친의 연루 사실이 당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의원직 사퇴 이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에 어려운 선거일 수 있는 중·성동구갑에 도전하게 됐다.

#### ◆尹 정부와 맞붙은 권익위원장 전현희

윤 후보가 초선인 것에 반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수도권 최대 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맞선 권익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전 후보는 지역구를 옮겨 중·성동구갑에 도전한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이 사의를 표하는데, 전 후보는 집권3년차인 2020년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2023년에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전 후보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셈인데, 결국 감사원이 전 후보의 근태와 관련 감사에 착수하는 등 권익위는 한동안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 전 후보는 이를 감사원의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면서 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연고가 없는 전 후보가 중·성동구갑에 잘 스며드는지가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후보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서울 종로에 먼저 한 적이 있으며, 중·성동구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해놓고 있었다. 다만 계파 갈등 논란 끝에, 전 후보가 중·성동구갑에 전략공천된 바 있다.

#### ◆세대 따라 갈리는 지지율

최근 여론조사에선 격전지 답게 윤 후보와 전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10일 서울 중·성동구갑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4.4%p, 응답률은 8.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전 후보는 42.9%, 윤 후보는 36.6%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둘의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 후보는 20대, 30대, 40대에서 윤 후보를 앞섰고, 윤 후보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전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50대는 전 후보가 42.5%, 윤 후보가 42.8%로 초접전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사퇴했다던 오세희 소공聯 회장 이튿날까지 ‘내부 결재권’ 행사

6일 낮 신청 후 7일 오후도 ‘회장직’  
본부장-상근부회장 거쳐 결재 ‘정황’  
연합회 비정규직 ‘대량 해고’ 제보도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채 비례대표를 신청해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사퇴했다는 회장이 내부 결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 전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소공연은 회장이 사퇴 직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선 신청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후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오 전 회장이 취임 후 소공연내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평명될 경우 비정규직을 아우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행보를 한 오 전회장의 ‘자격론’도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소공연 내외부에 따르면 오 전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42분 04초에 내부망을 통해 결재를 했다. 6일 오전에 사퇴했다는 회장이 대리-팀장-본부장-상근부회장을 거쳐 자신까지 올라온 결재권을 이튿날 버젓이 행사한 것이다.

오 전 회장은 전날(6일) 낮 12시까

지었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에 신청하기위해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소공연은 정치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회장이 직을 내려놓은 후 비례대표를 신청해야하는 것도 법적, 도덕적으로 강한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

아울러 소공연이 6일 오후 4시14분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에 보낸 공문(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신상관련 입장발표 임원회의 참석 요청)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세희’라는 글씨와 직인이 찍혀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오 회장은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전에 사퇴를 했다”면서 “공문에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은 당일 사퇴하는 바람에 반영하지 못했다. 또 사퇴후 ‘직무대행’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가 지난 다음날 반영되는 것이 내부 원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신청 전 사퇴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사퇴서를(비례대표 신청에)앞서 받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사태에 대해 소공연측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는 결과에 따라 조사권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尹 “익산-여수 고속철·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전남 무안군서 ‘스무번째 민생 토론회’  
“호남, 미래 산업 전진기지 길 열어  
광역경제권 형성, 교통인프라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생활권 확장과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과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순신장군의 ‘악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호남은 지금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율형 주행차의 영암 F1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베드로 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해 “광양항 자동화항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항만 등은 이미 전 영역에서 자동화 항만을 운영한다”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장비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흥을 기점으로 한 우주산업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흥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과 순천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이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무안·함평에 인공 지능(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기반 마련,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가공, 연구개발(R&D), 수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해안 치어까지 썩쓸이하는 중국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 불법 어구를 상시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